"설계 따로 내역서 따로" "현장 가보지도 않고 설계"

광주지역 학교 시설공사 횡포 심각

전문건설協 광주시회 274건 실태조사…30여건 문제 지적

학교시설공사를 발주한 광주시교육청과 각급 학교가 공사 과정에서 설계에도 없는 추가 공사를 요구하는 등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정업체에 하도급 시공을 주도록 강요하거나 설계도면과 내역서가 다른 주먹구구식 공사 추진도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가 지난 1월부터 8월18일까지 광주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발주한 학교시설공사 274건의 공사를 낙찰받은 전문건설업체 174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비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30여건의 크고 작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A학교에서는 설계도면과 내역서가 다른 가 하면, 내역서에 없는데도 추가 공사를 요구해 시공업체가 낙찰가의 10% 이상을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했다.

B학교에서는 신기술 공법으로 설계돼 전체 공사 중 90% 이상이 이 공법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특정업체에게 넘어가 정작 낙찰업체는 이윤을 남기지 못했다.

C학교에서는 현장에도 가보지 않고 설계가 이뤄져 공사부지가 설계도면과 절반 이상이 틀렸고, D학교에서는 "학교 행사가 있다"는 이유로 준공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길 것을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학교에서는 특정업체에서 자재를 구입하도록 지정해 자재를 비싸게 구입했다.

이밖에도 ▲발주처 공무원과 신기술 등록업체가 사전 협의 후 공사 고지 ▲설계도면에 없는 공사 시공 요구 ▲소액공사 감리 누락 ▲비현실적 단가로 인한 적자시공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중소건설업체 운영하는 F사장은 "학교시설 공사는 한마디로 돈(학교예산)에다 공사를 맞추는 경우가 허다하고, 예산이 실비의 70~80%에도 못미쳐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관계자는 "학교시설공사 대부분이 7000만원 이하로 소액 수의계약을 하다보니 발주처가 단가를 임의대로 적용해 현장 수량과 설계상 수량이 맞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추가 공사 요구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3년 전 시교육청에 이같은 현장의 소리를 전달했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향교, 추계 석전대제 봉행

14일 오전 광주 남구 향교에서 열린 '추계 석전대제'에서 유생들이 제를 올리기 위해 대성전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제 제85호로 지정된 석전대제는 성균관 대성전에서 공자와 그 제자, 설총과 최치원 등 명현 16위의 위패를 모셔놓고 매년 봄과 가을, 즉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에 거행하며, 지방에서는 향교가 주관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의회 갈등 재발되나

윤봉근 의장 "市 위원회·협의체 참가 않겠다"

'광주공동체 원탁회의'의 당연직 위원인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이 14일 창립총회에 불참하면서 광주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재발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애초 위원직을 승낙했던 윤 의장은 원탁회의만이 아니라 집행부가 운영하고 있는 협의체 및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의원들에게도 향후 불참을 권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집행부의 정책 및 사업결정 과정에서 시의회의 의견수렴 절차가 사라지면서 이들 양 기관의 불필요한 마찰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윤 의장은 이날 "시의회는 집행부가 결정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 자칫 원탁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해 시의회 전체가 발목을 잡혀 제대로 검토하지 못할 수 있다"며 "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와 원탁회의의 역할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의원들이 위원회나 협의체에 참석하고 있는 데 이 역시 집행부에 정책 및 사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광주시는 집행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시의회를 대표한 시의원이 참여하면서 집행부의 제출 안건에 대한 시의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 원탁회의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며, 시의회 의장도 지역의 대표인 만큼 의견을 듣겠다는 것일 뿐"이라며 "시의회가 견제·감시 기능만을 강조하기보다 광주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손재홍·조호권 의원 '매니페스토' 대상

홍기월 동구의장 최우수상

손재홍 의원 조호권 의원 홍기월 의장

광주시의회 손재홍 의원(동구2)과 조호권 의원(북구5)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선정한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역지방의원 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국 지방의원 3649명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계획서의 창의성과 내용성, 형식성 등을 평가한 결과 광역의원 대상 5명 중 광주시의회 의원 2명이 포함됐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손 의원은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앞으로 더욱 분발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할 각오다"고 밝혔다.

조호권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매니페스토 대상을 수상했다. 그는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월 동구의회 의장도 광역·기초 지방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편,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은 15일 오후 2시부터 영등포 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0·27 재보선 현장

송갑석 청렴구청장 공동서약식 제안

송갑석 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14일 10·27 서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할 입후보자들에게 '청렴 구청장 공동서약식'을 갖자고 제안했다.

송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구청장 보궐선거 발생 사유인 공무원 인사 관련 뇌물수수 관행과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깊은 인식과 실천의지가 중요하다"며 "민주당 후보들은 당선 후 단돈 10원이라도 받으면 즉각 사퇴하겠다는 '청렴 구청장 공동서약식'을 통해 도덕성과 청렴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우진 서구청장 재선출마 공식 선언

임우진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1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0여년간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30만 서구민의 삶과 미래에 새로운 희망이 되고자 제가 평생을 살아왔고 저를 키워준 고향에 돌아왔다"며 "서구민과 손잡고 서구를 호남의 중심도시에서 전국 제일의 선진자치구로 도약시키겠다"고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임 전 부시장은 "공직·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고 주민이 주인으로 참여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하고, 최고의 주거환경과 격조 높은 도시 기반을 갖추도록 정비하겠다"며 "특히 소외계층의 다양한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저소득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식 "불법선거 개입 공무원 퇴출"

김종식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는 14일 "불법선거운동에 개입하는 공무원과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 원 아웃제(퇴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서구청 조직을 빠른 시일 내에 재정비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 억울한 일들을 겪을 경우 청장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직소민원실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고재청 '교육 서구' 마스터플랜 제시

고재청 민주당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14일 "전임 구청장이 추진한 가칭 '행복 서구 장학재단'의 규모와 내용을 대폭 확대해 최소 200억 원 규모의 장학금을 적립해 인재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장학재단은 출연금과 기탁금으로 출발하겠으며, 연차적으로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히고 "재단의 운영과 관리 등 제반 절차에 대해서는 서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최종 결정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개인 정보 전자칩에 내장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앞으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전자칩에 내장한 전자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수록 항목에 성별과 생년월일, 발행번호, 유효기간을 추가하고, 오는 2017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전자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완료한다.

정부는 노후된 CNG(압축천연가스) 버스 폐차에 따른 구입보조금 44억9800만원 등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연합뉴스

서구선관위 "전주언 前 청장 보전비용 1억2800만원 반환"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전주언 전 서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당선자에게 지급한 기탁금 및 보전비용 1억2800여만원에 대한 반환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서구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하거나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은 보전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6·2 지방선거 후 당선자에게 지급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은 반환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